

동북아역사 리포트



Vol. 37

NORTHEAST ASIAN HISTORY REPORT

2023년 4월 1일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의 기원과 전개 과정

손장훈_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중화민족공동체’의 기원: 량치차오의 대민족주의와 쑨원의 오족공화
2. 항일전쟁 시기의 ‘중화민족’ 의식
3. 초기 중국공산당과 ‘중화민족’
4. 개혁·개방 이후부터 시진핑 시대까지: ‘중화민족공동체’
5. 공세와 수세의 전환이 자유로운 민족주의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의 기원과 전개 과정

손장훈_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2022년 7월 13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견고히 하는 일을 민족 업무의 ‘강령’으로 삼고, 각 대학교는 ‘중화민족공동체’에 관한 연구를 심화시켜 학생들의 국가관, 역사관, 민족관, 문화관, 종교관 등을 정확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10월 제20차 당대회에서도 ‘중화민족공동체론’이 언급되었다. ‘중화민족공동체’란 현 중국의 주류 민족인 한족은 물론 소수민족까지 포함하는 광역의 개념으로 각 민족이 교류와 동화를 통해 하나로 융합한 실체를 뜻한다. 현대 중국의 부상과 함께 주목받는 이 개념의 기원은 중국공산당이 탄생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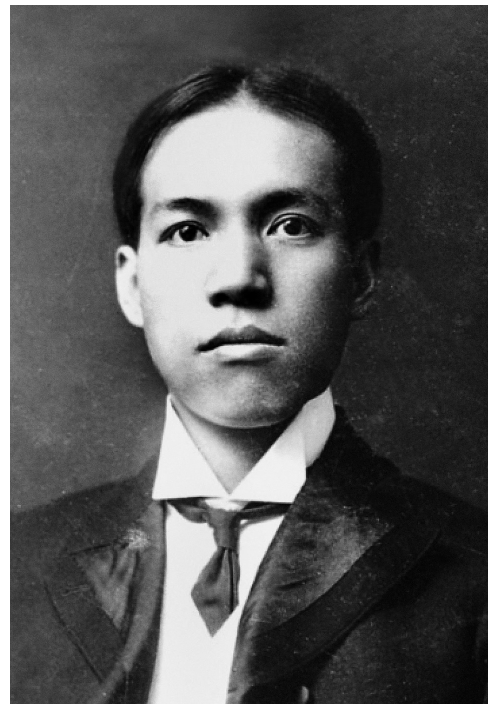
시진핑 국가주석과 소수민족 대표들
중화민족공동체는 현대 중국의 영토와
역사 안으로 주변민족들을 병합하기
위한 이론적 바탕이다

1. ‘중화민족공동체’의 기원:

량치차오의 대민족주의와 쑨원의 오족공화

중국 전통시대에는 ‘중화’라는 개념이 존재했다. 중원만이 유일한 문명이고, 주변부는 모두 야만의 상태라는 화이관은 이 ‘중화’의 다른 표현이다. 그러나 전통시대의 ‘중화’는 일종의 세계관으로 천하만민의 관계성에 관한 개념이었다. 근대 이후부터 이 ‘중화’에는 민족이라는 근대적 개념이 덧씌워지기 시작했다. 이른바 ‘중화민족’이다.

이 ‘중화민족’의 기원은 청말 량치차오(梁啓超)가 주창한 대민족주의다. 그는 중국사를 한족(漢族)이 주변 종족을 동화시켜 온 역사로 파악하고, 한족을 중심으로 각 종족이 갈등·경쟁하며 융합하여 탄생한 유기체가 ‘중화민족’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근대 중국 역시 한족을 구심점으로 몽골족, 회족, 묘족 등 주변 소수민족이 점진적으로 융합하여 대규모 공동체인 ‘대민족(大民族)’을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량치차오는 단일민족국가보다는 복수의 민족이 경쟁을 통해 성립하는 다민족국가가 더 강력하고 선진적이며, 한족을 중심으로 여타 민족이 융화된 ‘중화민족’은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동시에 중국사의 범주를 ‘지나문명권’으로 구상하고, 여기에 몽골, 티베트, 조선, 일본, 안남, 미얀마 등도 포함시켰다. 전통시대 ‘중화’의 세계관 안에서 독립적인 주권을 향유해 왔던 민족과 그들의 국가를 근대 중국의 영토와 역사 속으로 통합하려는 의도였다. 실제로 쑨원(孫文)은 중화민국을 수립할 때 량치차오가 주장한 ‘대민족’의 연장선상에서 한족·만주족·몽골족·회족·장족이 결합한 ‘5족 공화국’을 청사진으로 내세웠다. 이 대민족주의와 오족공화야말로 시진핑이 내세운 ‘중화민족공동체’의 근대적 기원이자 최초의 의식(意識)이다. 현대 중국 학술계도 ‘중화민족 대가족’ 개념의 기원을 량치차오로 설정한 후 쑨원과 난징 국민정부의 ‘오족공화’가 이를 계승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량치차오

청말의 저명한 학자이자 언론인이었던 그는 변법자강운동을 주도했던 정치가이기도 했다. 그가 주창한 대민족주의부터 중화민족 개념이 시작되었다.

1 俞祖華, 2022, 「清末民國時期中華民族大家庭觀念的發展」, 『山東社會科學』 2022年 第7期.

2. 항일전쟁 시기의 ‘중화민족’ 의식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 이후 일본 제국주의의 군사적 침략이 본격화되자 중국에서는 민족주의 정서가 강해졌다. ‘중화민족’에 대한 의식 역시 일본의 중국 침략과 발맞추어 강해졌다. 장제스(蔣介石)는 중국 주변의 국가들이 중국 문화를 아시아 공동의 전통으로 여기고 있기에 중국을 지도자로 삼은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될 수 있다고 천명했다. 더불어 중국국민당 정부는 최고지도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황제를 조상으로 섬기는 ‘중화민족’이 실재함을 선전하며 1935년 황제를 ‘중화민족’의 시조로 규정했고, 1937년에는 국가 의전으로 황제에 대한 공동 치제를 진행했다. 특히 항일전쟁 시기에는 일본의 괴뢰국들이 들

어선 만주, 몽골 등 변경[邊疆] 지역을 중국의 고유한 영토로 인식하고자 하는 의도가 두드러졌다.

푸쓰넨(傅斯年)²은 변강에 거주하는 민족들과 그들의 역사를 중국사에 포함시키며 이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려 했다. 그는 한반도와 만주 지방에 대해 고대 중국은 이곳에 거주하는 동이(東夷)와 동류의식이 있었고, 한무제(漢武帝) 이래 중국인의 진출과 확장이 거듭되어 대대로 지역의 군장으로서 통치해 왔다고 주장했다. 즉, 항일전쟁 시기 ‘중화민족’에 대한 의식은 량치차오가 창안한 대민족주의 개념에서 국토에 대한 인식이 유독 크게 돌출된 영토 민족주의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조선, 베트남, 태국, 버마 등 과거 조공국들까지 민족국가 중국의 영토에 포함시킨 것이다. 현대 중국의 ‘변강학(邊疆學)³은 바로 이 영토 민족주의의 계승이다.



장제스와 마오쩌둥
중국 현대사의 두 걸목은 서로 표현 방법은 상이했어도 중화민족이라는 의식 자체는 분명히 공유하고 있었다.

- 2 중화민국 시기의 역사학자, 언어학자이다. 근대 중국을 대표하는 사학자로서 사료 정리를 중심으로 한 과학적 역사학의 방법을 정립했고, 중앙연구원 역사언어연구소 창립을 주도했다. 그는 『東北史綱』(1932) 저술을 통해 적극적으로 항전 상황에 대응했는데,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논거인 만몽배제론·일선동조론을 엄두에 두고 고대 이래 동북 지방이 중국의 강역이었음을 논증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한국이 단일한 역사 단위를 부정하고 대대로 중국의 판도에 있었음을 논증했으며, 일본의 만주 침략에 대한 대응으로 만주 및 한반도의 고대사를 중국사로 편입했다. 오병수, 2014, 『중국 근대 역사 교과서의 자국사 구축과정과 ‘중화민족’』, 『歷史教育』 132호, 98쪽.
- 3 신장 위구르, 티베트, 윈난, 둥베이 등 중국의 국경에 인접한 변경[邊疆, frontier] 지대 및 그곳에 사는 민족을 대상으로 한 학술 체계의 총칭으로 변경을 연구하는 민족학, 역사학, 지리학, 사회학, 인류학 등을 모두 포함한다.

3. 초기 중국공산당과 ‘중화민족’

오늘날의 행보를 보면 의외이지만 중국공산당은 창당 이후 한동안은 ‘중화민족’ 개념을 강조하려고 하지 않았다. 마르크스주의는 ‘민족’보다 ‘계급’을 우선할 것을 강요했고, 코민테른 역시 중국공산당에 ‘민족 자결’을 존중하라고 권고했다. 즉 중화민족의 이름으로 예측되었던 소수민족의 정치적 독립과 자주를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코민테른의 권고가 있었고 혁명 과정에서 소수민족의 협조가 절실했기 때문에 중국공산당은 각 민족의 자결권과 이를 바탕으로 한 연방제를 약속했다. 가입과 탈퇴를 상정한 연방제가 공표되자 일종의 단일민족으로 개념화된 ‘중화민족’은 논외가 될 수밖에 없었다. 중국공산당이 내세운 민족 자결 및 연방제와 심각한 모순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 내부에서 ‘중화민족’을 다시 논의한 것은 2차 국공합작 때부터였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응하면서 계급보다 민족 이념을 앞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오쩌둥(毛澤東)은 ‘모순론’을 역설하며 전시상황인 중국이 당면한 주요 모순은 ‘민족’이며, 이는 일시적으로 계급보다 우선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후 중국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하며 ‘중화민족’은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논의되었다. 1949년 신중국이 건국된 직후 티베트와 신강 위구르를 병합할 때 이 두 지역은 제국주의자의 이간책을 극복하고 ‘대가족[大家庭]’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⁴는 명분으로 언급된 것이다. 하지만 문화대혁명⁵이 보여주듯 마오쩌둥 치하의 중국은 아직 ‘민족’보다 ‘계급’이 우선이었다.

4. 개혁·개방 이후부터 시진핑 시대까지: ‘중화민족공동체’

마오쩌둥의 사망과 함께 그의 시대가 끝나자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념의 순위 조정을 선언했다. 덩샤오핑(鄧小平)의 집권과 함께 개혁·개방이 시작되고, 시장경제를 포함해 과거에 부정되거나 경시되었던 이념

4 Chen Jian, "The Chinese Communist 'Liberation' of Tibet", Jeremy Brown & Paul G. Pickowicz eds., 2007, *Dilemmas of Victory: The Early Yea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pp. 135, 142.

5 1966년부터 1969년까지 마오쩌둥이 일반 대중을 동원하여 정적들을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실권파'라고 매도하며 공격한 사건을 지칭한다. 대약진과 인민공사 실패로부터 비롯된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벌인 일이었지만 앞선 매도에서 알 수 있듯이 겉으로는 '계급 투쟁'을 표방했으며, 대중을 호도할 때도 계급의 적들을 공격하자는 명분을 이용했다. 비단 문화대혁명뿐만 아니라 진압반혁명운동, 반우파운동, 사청운동 등 마오쩌둥이 집권했던 시기 중국에서 벌어졌던 대규모의 사건들은 대개 계급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들이 다시금 부상했다. ‘중화민족’도 그중 하나였다. 이 개념은 특히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화하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제20차 당대회 이후 집권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며 ‘제2의 마오쩌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 시진핑 주석이 공개적으로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여러 차례 언급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19년 9월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을 이루는 모든 구성원의 교류·융합을 통해 14억 국민의 ‘다원일체(多元一體)’와 운명공동체의 대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다원일체’와 운명공동체가 적시하는 것이 바로 ‘중화민족공동체’이다. 또 제20기 전국 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은 국가통일의 기초이자, 민족단결의 근본이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몽(中國夢)의 바탕이므로 지속적인 행동을 통해 더욱 견고히 해야 한다고 그 정체성과 지향점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공고히 하기 위해 각 대학교가 ‘중화민족공동체’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국가관, 역사관, 민족관, 문화관, 종교관 등을 정확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중국의 학술계와 교육계 전반을 ‘중화민족공동체’의 완전(完全)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공세와 수세의 전환이 자유로운 민족주의

‘중화민족’의 흥미로운 특징은 그 역사로부터 나온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화민족’은 전통시대 대제국에서 발아했고, 아편전쟁 이후 반식민지 상태에서 성숙하면서 지금의 ‘중화민족공동체’라는 모습을 갖추었다. 그렇기에 이 독특한 민족주의는 그 내부에 오만한 호전성과 겁에 질린 소극성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시세에 맞추어 대단히 자유로운 공세와 수세의 전환을 보여줄 수 있다. 다만, 신장 위구르, 티베트 등의 문제가 대두하며 소비에트연방처럼 공중 분해될 수 있다는 위기가 덮쳐올 때는 중국은 다민족국가 아닌 ‘중화민족’이라는 단일민족이라는 명분으로 분열을 막는다. 중국의 국력이 팽창하여 주변국에 간섭할 때는 변강의 민족도 ‘중화민족’이므로 중국에 복종해야 한다는 침략적 민족주의가 발현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들었다는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발언도 이런 의미에서 ‘중화민족’과 관련되어 있다.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 안으로 통합하려는 동북공정을 상기하면 이 말이 단순한 수사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용이하게 추측해 볼 수 있다.

시진핑 정권의 ‘중화민족공동체’가 중국 현 지도부의 당면한 요구로부터 나왔다면 당장의 정치적 변화나 필요성에 의해 방기되거나 변화를 겪을 수 있다. 이 경우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의 선양 노력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화민족공동체’는 역사 속에 단단히 뿌리내린 대단

히 위협적인 개념이며 중국의 사상적 무기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은 ‘중화민족공동체’ 의식과 그 나아갈 길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 이 글은 집필자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 손장훈 |

동북아역사재단 한중관계연구소 연구위원. 중국 현대사를 전공했고, 최근 연구로는 「건국 초기(1949~1953) 上海市 주민 조직 재편 연구-도시 基層社會에 대한 黨-國家 권력 투사의 한계-」(『동양사학연구』, 2020), 「中華人民共和國 初期 攤販 管理 연구: 上海市 사례를 중심으로」(『중국사연구』, 2022) 등이 있다.

『동북아역사리포트』 지난 호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창간호** 보존과 철거의 갈림길: 일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의 현대사
- 제2호** 시진핑 시기 험한이 고조된 원인은 무엇일까
- 제3호**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와 현황
- 제4호** 중국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공정의 변화 -신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속 한국과 동북아-
- 제5호** 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그림자
- 제6호** 중국이 주장하는 '문화원조'의 배경과 문제점
- 제7호**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8호**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제9호** '종번(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 제10호** 서양 고지도로 확인한 우리땅 독도와 동해 표기
- 제11호**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따른 대응 방안
- 제12호** (영문판)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13호** 일본 언론에 공개된 '독도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14호** 2022년 검정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 제15호**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의 성격' 비판
- 제16호**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의 동인(動因)과 쟁점
- 제17호**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 제18호** 1947년 미 군정장관, 독도 출장을 허가하다
- 제19호**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했는가-
- 제20호**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전망
- 제2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결의 과제
- 제22호** 광복 77주년,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 제23호** 한국-중국 수교에 가려진 한국-중화민국 단교 30년
- 제24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자
- 제25호** 동북공정 20년, 현황과 과제
- 제26호** 중국에서 사라지는 우리 고대사
- 제27호** 한국과 베트남 관계 30년을 되돌아본다
- 제28호** (영문판)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 제29호** 중국 장성(長城)이 한반도 서북부지역까지 들어왔다고
- 제30호** 연·진·한 장성은 요동지역에 있었을까
- 제31호** 우리 역사 속의 러시아를 생각하며
- 제32호** 중국의 방어적 민족주의와 공세적 문화 주장
- 제33호** 독일-프랑스 역사 화해의 회고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래
- 제34호**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에서 사라진 '강제(forced)'
- 제35호** 3·1절에 생각하는 야스쿠니신사 한국인 무단 합사 철회 소송
- 제36호** 시진핑 3기와 천하주의 그리고 동아시아의 갈등